

EU 역내에서의 EUDR 간소화 요구 최근 동향

2025. 8. 11.(월)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임석승



EUDR 간소화 요구 동향

1

EU 농업·어업 이사회('25.5.26)

- EUDR이 규제 목적에 비해 농업인과 임업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
- 무위험국 등급 신설 등 규정 간소화
- 적용 시점 재연기 요청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 11개국가가 지지

2

농업 장관 공동 서한('25.7.7)

- EU 18개국 농업장관 공동
- EUDR 추가 간소화 및 연기 요구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

3

유럽 의회 결의안('25.7.9)

- 국가별 위험등급 평가 철회
- 무위험국 등급 신설 등 평가 방식의 재검토 요청

373명 찬성, 289명 반대, 26명 기권으로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나, 집행위원회에 대한 구속력은 없음

EU 농업·어업 이사회 주요 내용

- 산림전용 및 황폐화가 잘 통제되고, 위험도가 낮은 지역 및 나라에 대해 '위험 없음(insignificant risk)' 등급 분류 도입
- 이들 지역·나라에 대해서는 지리정보 기록 의무 및 당국의 검사 절차 등 면제
- 산림전용 위험이 없는 국가에서는 재조림 등을 통해 산림벌채를 상쇄할 수 있는 보상 메커니즘 허용
- EUDR의 보고 및 문서 요구 부담 최소화
- 사기 등 부정행위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입 제품에 대한 엄격한 통제 시행
- 적용 시점도 기존 '25년 12월 30일에서 추가 연기할 것을 요구

농업장관 공동 서한 주요 내용

불균형한 부담 및 경쟁력 저하

- 산림전용 위험이 거의 없는 국가의 농업인, 임업인, 산주에게 과도한 규제임
- 기업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경쟁력을 떨어뜨림
-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비용 및 가격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생산자가 EU 역외로 생산지를 옮겨갈 수 있음

EU 시장 내 추적성의 어려움

- EU 시장 내에서 EUDR의 완전한 추적성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일부 기업에게는 거의 불가능함

저위험 국가에 대한 간소화

- 농지 확장을 위한 산림전용이 미비한 국가의 경우 과도하고 중복적인 실사 요구가 없어야 함
- 산림전용 위험이 낮은 국가에서는 기존 자국 시스템으로도 EUDR 준수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함
- 산림전용 위험이 현저히 낮은 국가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간소화 되어야 함

유럽 의회 결의안 주요 내용 (문제제기)

데이터의 질과 방법론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 최신 자료와 관련 위험 지표의 적절한 활용 실패로 현재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함
- 산림 황폐화를 위험 요소로 인정할 경우 일부 EU 회원국조차 고위험으로 분류될 수 있어, EU 공급망은 저위험이라는 전제를 흔들 수 있음
- 위험 지표의 가중치 부여 방식 투명성 부족, 국가 안에서의 지역 간 차이 미반영 등 방법론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 제기

저위험국 분류 기준 문제

- 적용 기준이 산림전용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간 산림전용 비율 및 면적 기준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 목재 생산량을 산림전용 지표로 간주한 것은 합법적 임업 활동과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산림전용과 혼동하는 것이라 비판함

정밀성 결여

- 3개 위험 등급(저위험, 표준위험, 고위험)은 세분화가 부족하여 국가별 현실을 반영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무위험(negligible risk)' 등급 추가 제안
- 특정 지역에서의 산림전용이 만연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 위험 등급 분류보다는 지역 모니터링 체계 확립이 필요

공정성 및 국제협력 문제

- 현재의 분류 체계는 국가들의 데이터 공유와 협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분류로 인식될 위험이 있음
- 원주민,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므로 참여적 접근 방식 필요

유럽 의회 결의안 주요 내용 (권고사항)



기존 국가 위험등급 평가 철회

2025년 5월 유럽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국가별 위험등급 평가 재고 및 철회



벤치마킹 시스템 개정

최신 데이터 기반, 지역적 차별화 허용, 위험 지표의 투명한 가중치 부여



명확한 절차 수립

최신의 측정가능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위험등급을 정기적으로 재평가 하기 위한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 수립



이해관계자 참여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관련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산림 거버넌스 개혁 및 추적 시스템에 대한 지원 제공



보완적 조치 이행

산림 파트너십, 기술 지원, 공정 무역 인센티브와 같은 보완적 조치 시행

EU 집행위원회 환경 법률 행정부담 간소화 의견 조회

개요

- 목적 : 환경 관련 법률의 목표는 유지하면서 법률 내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 사이트 주소 :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4794-Simplification-of-administrative-burdens-in-environmental-legislation-en>
- 의견 조회 기간 : 2025. 7. 22 ~ 2025. 9. 10
- 의견 제출 현황(2025.8.6 현재) : 주로 EU 회원국 일반시민 및 기업 등이 33건 제출(EUDR 관련 의견 7건)

의견 주요 내용

- EUDR 요구사항이 기업에 부담이 되며, 경쟁력을 떨어뜨림
- 학명 제출, 위치정보 제출 등에 부담이 큼
- 무위험국가 범주를 만들어서 이들 국가에서의 의무이행 면제 필요
- 최초로 규제대상 품목 및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업체에만 EUDR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 한정(하위 공급망 면제)
- EUDR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제 없는 과도기 시험 단계가 필요함

EU 내 협·단체에서 집행위원회에 보낸 서한

개요

- 제목 : EUDR 이행과 관련하여 명확화 및 실질적 해결방안 요구
- 날짜 : 2025. 7. 28.
- 공동서명 단체 : EUDR 규제 품목 관련 10개 협·단체(타이어 및 고무제조업체 연합, 제지산업 협회, 바닥재 연합, 코코아 산업 연합 등)
- 배경 : ① EUDR에 대한 논쟁 및 추측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음 ② 법적 확실성과 운영준비를 위해 명확한 향후 계획에 대한 즉각적인 설명이 필요함

요구 내용

- ① EUDR 이행에 대한 향후 일정에 대한 명확하고 빠른 설명 필요(적용시기 연기, 법 개정, 규정 간소화 여부 등)
- ② 법적 타당성과 상업적 실행 가능성이 있는 실질적이고 실행가능한 가이드라인 제공
- ③ EU 집행위에서 배포한 FAQ와 가이드נס가 모든 27개 회원국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고, 새로운 해석이 생길 경우 EU 집행위의 공식 경로를 통해서만 발표되도록 하여 이해와 적용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

감사합니다!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 사무관 **임 석 승**

www.forest.go.kr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T 042-481-4085

F 042-481-8884

M 010-5370-7283

E limss99@korea.kr

*이 종이는 지속가능한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로 제작되었습니다.

